



장영석 | 성공회대학 중어중국학과 교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환황해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의 동단이자,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환황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환황해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환황해의 위험 요소를 억제하고 기회의 요소를 발전시키면서 안정·평화·번영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야 하지만,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 같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주목되는 한·중 관계

한국에서 '환황해'의 개념이 대중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것은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다. 당시 김영삼 후보는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남·북한, 중국, 홍콩을 포함하는 '황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그 개념을 구체화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환황해권의 발전 문제를 '동북아 공동체' 개념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간 '동북아 공동체' 발전 구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남한의 북한에 대한 5·24조치 등 일련의 사건들로 남·북한 관계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센카쿠 또는 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한·일 및 중·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이 돋보인다.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시 한·중 양국은 '2014년 한·중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협력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인문적 유대의 강화 프로젝트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 한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서 한·중 관계가 대단히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한·중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과 북한을 견인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선택 폭은 결코 크지 않다. 결국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발전시켜나가기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중국의 동북지역 및 북 황해권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한국은 중국의 동북지역 및 북 황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4년 5월 21일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중국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사이에 체결된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가스가 중국의 동북지역(중국 동북 3성, 베이징, 산둥반도)에 유럽 공급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국에 공급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한국으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북한을 거쳐 간접적으로 남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둘째, '넓은 동북 공업 기지의 전면적 진흥(東北老工業基地全面振興)'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랴오둥(遼東)반도의 다롄(大連)시와 산둥(山東)반도의 옌타이(煙台)시 사이의 123km를 해저 고속철도 터널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다롄, 단둥(丹東),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칭다오(靑島), 옌타이를 잇는 중국 동북지역, 북 환황해권의 거대한 경제 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선택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반도 연결 문제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이 중국 동북지역, 북 황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 전남북, 부산 등 한국 서남해안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한 거시적인 전략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상호 과다한 중복 경쟁을 피하고, 경쟁 우위의 요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 정부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한 관계가 호전된다는 전망하에서 북한의 서해안 벨트 개발까지 고려한 '담대한 전략'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